

'계엄군 진술' 검증없이 인용...법적 권한 활용도 못해



44년만의 진상규명, 불씨 살려야 <중> 진상조사위 '부실 보고서' 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와 관련 광주 시민사회에서는 한결같이 '조사가 미흡했다'고 입을 모은다. 진상조사위가 특별법에 명기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계엄군의 진술을 검증 없이 인용하는 등 부실 조사의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지적한다. <고발·수사 등 조사권한 활용 못해> 진상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청문회를 열지 않고 검찰 동행명령권 활용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을 갖지 못해 강제조사를 못하는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보장받았

5월 당사자 주장 담은 양비론 나열 그치며 4년 여 '허송세월' 가해자 증언대 세울 청문회 개최 않고 압수수색 청구도 없어

다. 조사에 불응하는 조사대상자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의뢰할 권한이 있으며, 증언·감정·진술 확보 및 증거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고발 및 수사요청을 한 바 없으며,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도 3건에 그쳤으며 그 중 2건은 기각됐다. 주남마을, 송암동 등 민간인 집단학살 및 즉결 처형 사건의 경우 가해자 계엄군을 특정했음에도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 하지도 않았다. 청문회조차 열지 않아 1988-1989년 5공화국·광주청문회 이후 34년만에 생존 5·18 가해자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있는 기회도 무산시켰다. 낮은 계급의 계엄군부터 시작해 지휘부까지 올라가는 상향식 조사 방식을 택해 한계를 보이기도 했

다. 2만여명의 계엄군을 조사했는데도 유의미한 진술은 246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계엄군 등 5·18 관련자 진술 채택에 치중한 탓에 객관적 증거 확보가 미흡했으며 진술의 신빙성 판단도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컨대 5월20일 광주역 부근 발포경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경위 등에 대해서는 계엄군 진술에 대한 교차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활동 종료 3개월을 남기고 사무처장에게 '청문회 10월 개최설 번복' 등 조사위 안팎의 논란에 대해 책임을 묻고 사직권고를 내리는 등 내용이 일어나기도 했다. 광주 지역 인사들을 조사관으로 채용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도 못하고 활동기간 4년 여를 허송해 '진상 조사위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조롱을 듣기도 했다.

조사위원회 조사관은 총 53명이었으며, 이 중 2020년 2명, 2021년 4명, 2022년 11명, 2023년 16명 등 4년 동안 총 33명이 교체돼 전문성 논란도 일었다. <계엄군 주장 그대로 옮겨놓은 보고서> 진상조사위 보고서에 대해서는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양비론적 시각에서 주장들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상규명이라는 진상조사위의 애초 목적을 저버린 결과라는 것이다. 군·경의 기록물이 왜곡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자료를 여과 없이 인용하면서 무고한 광주시민을 향한 발표를 '자위권 확보 차원'이라는 등 군·경의 왜곡된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는 것이다. 같은 사건에 대해 두 개의 보고서가 다른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권용은 일병 사망 사건'의 경우 '발포경위 및 책임소재' 보고서에는 권 일병이 계엄군 장갑차에 치였다고 기록했으나, '군·경의 사망·상해 피해' 보고서에서는 여러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정확한 사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

했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의 조사내용 수정 요구로 중간에 보고서의 내용을 뒤바꾸면서 '진상 규명 불능' 결정된 사례도 있었다. '전남 일원 무기 피습사건'의 경우 2023년 9월 보고서에서는 '진상규명' 내용으로 조사보고서의 소결이 작성됐으나, 이후 이종협 상임위원 등의 지적을 받아 '무기 피탈시간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확실할 수 없다'는 취지로 소결의 내용의 바뀌었다. 이때문에 조사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결국 보고서 통째로 '진상규명불능' 결정됐다. '진상규명불능' 중 하나라면 결정해야 하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내용 중 일부가 규명되지 않으면 보고서 전체가 '진상규명불능' 결정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예컨대 '암매장' 관련 보고서는 암매장이 실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해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상규명불능' 결정돼 마치 암매장이 거짓이라는 듯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



오월 영령 위로의 손길 7일 오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자원봉사자들이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묘비를 닦고 조화를 교체하며 오월영령을 위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월 대책위 "5·18 공법단체 뼈 깎는 자성해야"

광주시민사회가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공로자회의 비리(5월 7일자 광주일보 6면)와 관련, 두 단체에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오월정신지킴이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입장문을 내고 "5·18 부상자와 공로자회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자신의 영달과 이권을 위해 오월 정신을 실추시키고 오월 영령과 광주 시민들을 배신한 일부 공법단체 회원들을 규탄한다"며 "비리에 연루된 자들이 공법단체를 대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5·18은 개인이나 일부 단체가 독점할 수 없으며, 공법단체가 되었다는 것이 5·18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두 단체 일부 간부들은 지난해 자신의 영달과 이권을 위해 특전사와 화해소를 벌여 공법단체의 이름으로 5·18을 판 매국노 같은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해소를 통해 공수부대는 피해자로 둔갑했으며, 이 논리는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

회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5·18의 가치를 폄하하고 조롱하는 '군경 피해 보고서'가 나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공법단체들이 5·18의 명예와 가치를 지키는 파수꾼이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5·18 부상자와 공로자회는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통해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부상자회장과 공로자회장에게 '2023년 보훈단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를 하고 황일봉 전 부상자회장 등 2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41명에 대해 배임, 횡령,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소화자매수녀원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 없다"

광주지법, 소화수녀회 승소 판결

소화자매원에서 평생 봉사를 해온 수녀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수녀원 신축 공사(2021년 4월 16일자 광주일보 7면)와 관련, 도급업체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할 채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상호)는 재단법인 예수의 소화수녀회(수녀회)가 A도급건설업체 소송승계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에서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수녀회는 지난 2021년 6월께 수녀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A업체와 지난 2022년 2월까지 완료를 조건으로 22억 8000만원에 체결했다. 수녀회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성금(완성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18억 2400만원을 A업체에 지급했고 같은해 5월부터 9월까지 직접 하도급 업체에게 3억 5000여 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아 수녀회는 지난

2022년 10월 4일 10월 31일 까지 완공되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11월 초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업체는 지난해 3월 광주지법에 법인회생을 신청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A업체는 수녀원 신축공사와 관련된 물가변동 및 설계변동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7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자 수녀회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녀회와 A업체와 물가변동이나 설계변동 등을 반영해 공사대금을 변경하는 약정을 했다면 변경계약서, 약정서, 확인서 등 서면을 작성했을 것이지만 이러한 증거가 없는 점을 보면 합의조차 없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도급대금을 지불한 것도 A업체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지정을 한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만 공사대금을 묵시적으로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故) 조비오 신부의 꿈인 소화수녀원은 올해 1월 완공됐고, 지난달 27일 축미사가 열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광주시교육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최우수인 SA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약완료도, 목표달성, 주민소통 3개 분야에서 이뤄졌으며 광주시교육청은 전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체계적인 공약 관리와 시민과

의 소통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마다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직선 4기 공약사업 이행 평가·권고안 수용·5대 분야 66개 공약사업 102개 세부과제 이행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 등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정은 광주시교육감은 "남은 임기에도 공약 이행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